

종합·해설

신당 후보 3인 진영서 본 광주·전남 경선 판세·전략

“孫風 불것” “鄭 대세론” “李 역전론”

孫 광주 경선 지휘역 김동철 의원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고려, 결국 손학규 후보를 선택할 것입니다.” 손학규 후보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맡다가 선거대책본부 해체 이후 사실상 광주지역 경선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동철 의원(광산구)은 “경선 초반 4연전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정동영 후보에 뒤졌지만 이는 조직선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꿰뚫어 보고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동안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손 후보 밖에 없다’는 여론이 형성된 만큼 승리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잠적은 동원선거 강력 항의 표시

호남민이 진정성 평가해 줄 것”

“광주·전남의 선택은 추후 경선 가도에 ‘손풍’이 나타나면서 경선 승리는 물론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잠적 파동이 지역 조직과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김 의원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동원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정 후보 측의 조직선거는 감동보다는 오히려 경선의 흥행을 반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손 후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홀출단신 다시 경선에 복귀한 이후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정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추석 민심이 손 후보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손 후보는 인위적인 조직선거를 거부하고 진정성 하나만을 들고 광주·전남에 자신의 정치 인생을 던졌다”며 “높은 정치적 수준을 지니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민이 그의 진정성을 평가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역사의 고비마다 탁월한 정치적 선택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옳은 방향으로 주도해왔다”며 “이번 경선에서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맞서 정권재창출을 실현시킬 주자는 손 후보라는 점을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鄭 캠프 광주 선대본부장 양형일 의원



“정동영 후보는 광주·전남의 정치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민주·개혁·평화세력의 결집을 이끌어 한 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주자라는 점에서 승리를 자신합니다.” 정동영 후보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과 광주지역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은 “현재 판세는 정 후보가 45%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는 반면, 손 후보가 25% 정도, 이 후보가 17~18% 정도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그래도 정 후보 밖에 없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된 만큼 광주·전남지역 경선에서 정 후보가 2

“鄭후보만이 DJ·盧 지지세력 결집

45% 지지로 2위와 더블 스코어”

위 후보에 비해 많은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표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정 후보의 ‘본선 회의론’과 관련, 양 의원은 “민주세력의 정통성을 승계한 정 후보만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킬 수 있다”며 “정 후보는 광주·전남지역 경선에서의 대승을 바탕으로 최종 후보로 선정된 이후 대선 막판 후보단일화 등을 통해 민주세력을 재결집,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한 판 대결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 의원은 “정 후보만큼 호남에 대해 고민한 주자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정 후보는 호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경쟁 후보들에 대해 양 의원은 “손 후보는 확고한 지지 기반이 없는데다 민주·개혁 세력을 결집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한편 “이 후보는 대중적 지지 기반이 취약하고 독자적 이미지가 강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꺾을 수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양 의원은 “정 후보는 호남의 정체성과 민주·개혁세력의 전통을 이어가는 주자”라며 “정 후보의 한반도 평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 경영 정책은 한반도 운하 등 토목공사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집권을 저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李 캠프 전남본부장 서갑원 의원



“손학규 후보의 잠적 파동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이해찬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는 곧 표심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이해찬 후보 캠프에서 전남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갑원 의원(순천)은 광주·전남지역 경선 판세에 대해 “이해찬 후보가 정동영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며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광주·전남 선거인단을 10으로 보면 정 후보가 4, 이 후보가 3.5, 손 후보가 2.5 정도를 점하고 있으나 막판 이 후보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에서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손 후보는 ‘잠적 파동’이라는 자살길로 조직

“조직선거 행태 부정적 인식 확산

李 막판 바람이 鄭 조직력 누를 것”

기반이 흔들리는 등 경선 승리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경선 구도는 조직력의 정 후보와 막판 바람을 타고 있는 이 후보와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특히, 손 후보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그래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승계하는 정통성 있고 똑심 있는 이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 후보 측의 조직선거 행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조만간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의식 수준이 높은 광주·전남 지역 민심은 결국 이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충정 출신인 이 후보가 광주·전남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호남과 충청 민심의 결집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민주세력의 결집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강력한 대결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주자는 이 후보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이후의 국회위원에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 후보는 능력에서나 도덕적 측면에서 확실하게 검증된 주자”라며 “대선 승리를 위해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이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방의 선택! 희망 2007 ■ 신당 후보별 지방분권 정책

손학규 “수도권 기업 본사 지방 이전”

손학규 후보는 강력한 지방자치 실현 의지 차원에서 지방분권정책을 선포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연방정부 수준의 분권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이어 정권 초기에 재정분권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손 후보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다”고 평가한 뒤 “한 부처로 정책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청와대 비서실에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담당수석을 두어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손 후보는 ‘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전제한 뒤 “미군기지 반환토지 등을 기업에 장기 임대하고, 수도권 입주 기업은 본사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권한의 획기적 이양에 대해서 그는 “차기 정부에서는 선 재정분권, 후 사무이관방식으로 과감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원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를 인상과 관련, ‘다른 대안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이라고 답변했다.

정동영 “중앙권한 이양 신중 검토”

정동영 후보는 참여정부의 정책 지속성을 위해 기존 지역전략산업 정책의 유지 발전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역산업진흥, 테크노파크 조성, 지역기술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이양 △국가균형원 설치 △대통령 비서실 자치수석 신설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초광역으로 행정구역 개편 △국회 상원제도 도입 △지방교부세를 인상 등에 대해서 모두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앙행정권한 이양에 대해 “지방정부의 투명한 운영과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관위임 사무 폐지”에 대해서도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뒤 “자치체와 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차기 정부는 정부조직 축소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므로, 국가균형원 설치의 신중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해찬 “분권 균형발전부 설치”

이해찬 후보는 차기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관련, 청와대에 ‘지방분권·균형발전 수석비서관, 정부 안에 ‘지방분권 균형발전부’를 각각 설치하겠다며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에 대해 가장 강력한 입장을 피력했다.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 후보는 “과거 정부에 비해 노력했으나 중앙부처의 저항과 정치권의 정략적 대응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참여정부 지방분권 정책 성과를 평가했다. 이 후보는 “차기 정부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을 기필코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강화(국고보조금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인상, 국세와 지방세 재정부 등) △자치입법역량(자치 입법권·조직권·행정권 확대) 강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권한 재조정 등을 중점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광역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폐지”, 국회 상원제 도입은 ‘신중검토’라고 응답했다. /정승희기자 who@kwangju.co.kr

산행안내
9월 29일(토) ▲무등도요산악회 경남 편양기차서 9월29일(토) 06시30분 시작
9월 30일(일) ▲오산회 흥복 회신 협보신 9월30일(일) 07시 경주역 출발
10월 1일(월) ▲광주자연보호회 산행 삼산산 9월30일(일) 07시 무등경기장 출발
10월 2일(화) ▲광주자연보호회 산행 삼산산 9월30일(일) 07시 무등경기장 출발

광주뉴너달산악회 동영 한신심 방산 10월21일(토) 08시 경주역 출발
광주자연보호회 산행 삼산산 9월30일(일) 07시 무등경기장 출발
광주자연보호회 산행 삼산산 9월30일(일) 07시 무등경기장 출발

(주)홈컨부동산 리서치
T. (062)385-9994, 233-2222 상무지구 주택공사역
대상: 광주 전역을 손금 보듯이 봅니다.
대상: 미시적 거시적 부동산 흐름을 통합합니다.
대상: 광주 전역을 매물로 가정합니다.
대상: 5억원이상만 거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 정밀한 법인업무 등에도 꼭 맞습니다.
대상: 광주 또는 상무지구로 통하는 목입니다.
대상: 열정적이고 정돈된 인재만 확보합니다.

대지부동산
T.062-371-2440 011-627-3003
임야, 목장, 아파트 전원주택 전문

변비·비만
세계가 깜짝 놀랄 기적의 물질 발견!!
가장 쉽고 빠르게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
시판기념 특별 할인
15일은 ₩58,000 (배송료 무료)
070-7012-0246, 017-291-3115
천지영천원
- 대리점 및 영업사원 모집 -
www.cjyc.co.kr